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1) 정치의 기능 (두 관점의 공통점)

-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의 해결
- 경제적 부나 정치적 권력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권위적으로 배분됨.

(2) 좁은 의미의 정치

- 국가와 관련된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관점(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움.)
-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봄.
-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 활동
-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
- 대통령의 국정 운영
-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 판사의 판결 선고, 경찰의 체포(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

(3) 넓은 의미의 정치

-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 학급 규칙 제정을 둘러싼 친구들 간의 대립
- 한정된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 공공시설의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등
-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정치로 보는 모든 사례를 정치로 봄.

2. 법의 이념^{☆☆}

(1) 정의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 법 제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이바지함.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 절대적·형식적 평등 추구	- 상대적·실질적 평등 추구
-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함.	- 개인의 능력·상황, 필요 등의 차이를 고려함.
- 예시: 1인 1표제	- 예시: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소외 계층 지원

(2) 합목적성

-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

(3) 법적 안정성

-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 법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법이 쉽게 폐지되거나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함.
- 일반인의 법의식에 부합해야 함.

3. 법치주의^{☆☆☆}

(1) 법치주의 (두 유형의 공통점)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해야 함. → 법치주의의 등장 배경에 기반함.
- 두 법치주의 유형 모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함.
- 법률은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구속하는 근거가 됨.
- 사람(人)의 지배를 부정함.

(2) 형식적 법치주의

-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
-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경계
- 형식과 절차의 합법성만 중시
- 합법적 독재의 가능성(법 내용에 의한)
- 국가 권력의 자의적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3)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법의 실질적 정당성 확보에 주목
- 헌법 이념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짐
- 과잉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함.
-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형식적, 실질적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통치를 경계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의 내용을 중시하지 않으므로 자의적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경계≠비판)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4.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주의

-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음.
-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
 - '복수 정당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당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을 보장함.
 - 재외 국민의 선거권 보장(재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임.)
 -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2) 자유 민주주의

-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 통치
- 자유 민주주의 실현 방안
 - '복수 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 사유 재산제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
 - 권력 분립 제도

(3) 복지 국가의 원리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권리
-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
-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함.
-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권리
-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 무상 의무 교육 시행
 -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 실시
 -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근로에서의 특별 보호

(4) 국제 평화주의

- 국제 질서를 존중,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
- 국제 평화주의 실현 방안
 - 침략 전쟁의 부인(모든 전쟁 부인 X, 방어 전쟁 인정)
 -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 보장
 -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국제 법규 → 국내법과 같은 효력

(5) 문화 국가의 원리

- 문화 영역에서의 자유를 보장
- 국가가 문화를 보호 및 지원한다는 원리
-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 평생 교육 진흥
 - 무상 의무 교육 시행
 -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

(6) 평화 통일 지향

-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
-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기본 원리
-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
 -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 헌법상 대통령에게 평화 통일을 위한 의무 부과

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
- 포괄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됨.)

② 행복 추구권

-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포괄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됨.)

(2) 개별 기본권 유형

① 자유권

- 국가권력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
 - 국가에 소극적 개입을 요구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음.
- 포괄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됨.)

②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 받지 않을 권리
 - 상대적·비례적 평등(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인정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 포괄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됨.)

③ 청구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해지는 수단적 권리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 절차적 권리, 열거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됨.)

④ 참정권

-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 국민 주권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본권

⑤ 사회권

- 국가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
 - 국가에 적극적 개입을 요구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 현대적 권리(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등장)
- 열거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됨.)
- 복지 국가의 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본권

6.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1) 기본권 제한의 근거 조항(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기본권 제한 요건과 한계

→ 모든 기본권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거쳐 제한할 수 있음.

- ① 목적 요건: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② 형식 요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 ③ 방법 요건: 과잉 금지의 원칙
 - 1) 목적의 정당성
 -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2) 수단의 적절성
 -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인가?(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님.)
 - 3) 피해의 최소화
 - 해당 기본권 제한 수단보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가?
 - 4) 법익의 균형성
 - 침해되는 사익 ≤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익
- ④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

★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침해'할 수 없음. 과잉 금지의 원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인 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라고 함. (제한 ≠ 침해)

7. 전형적인 정부 형태***

(1)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 ① 특징
 -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
 - 총리와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음.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이원화(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 모두 법률안 제출권 가짐.
- ② 장점
 -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
 -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 가능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므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함.
- ③ 단점
 - 의회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려움.
 -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

(2) 전형적인 대통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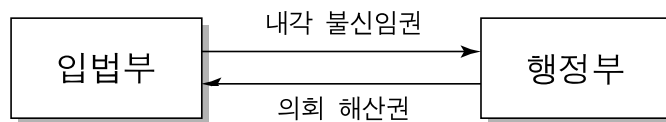
- ① 특징
 - 의회 의원과 대통령을 국민의 선거로 각각 선출함.
 - 엄격한 권력 분립 추구
 - 행정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됨.
 -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음.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원화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 의회와 달리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음.
- ② 장점
 -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높아짐.
 -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 가능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음.
- ③ 단점
 -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 국민의 요구에 둔감할 수 있음.
 -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려움.

(3) 두 정부 형태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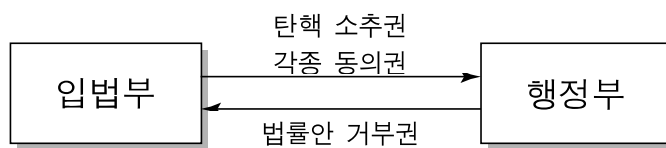
- 국민의 투표를 통해 입법부가 구성됨.
 -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함.
 - 국가 원수는 의회 신임에 의존하지 않음.
- ★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서로 다름.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반면, 국가 원수는 대통령 또는 왕으로서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서도 국가 원수는 의회 신임에 의존하지 않음.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 구분 필요)

(4) 각 정부 형태에서의 상호 견제 권한

①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② 전형적인 대통령제



8.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 (1) 대통령제 요소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국회의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 / 탄핵 소추권
- (2) 의원 내각제 요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가능
 - 국무 회의의 존재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존재)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음.
 -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가짐.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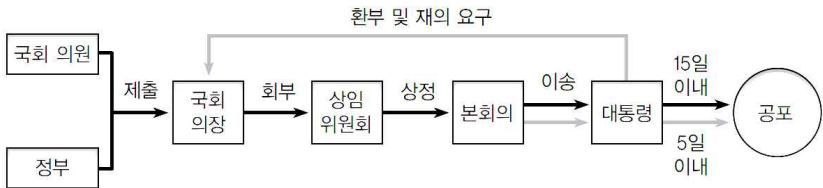
9. 국가 기관 - 국회***

(1) 국회의 지위와 구성

- 국민의 대표 기관, 국정 통제 기관, 입법 기관
- 의장 1인, 부의장 2인 /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등
-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됨. (임기 4년)
- 정기회: 매년 1회 개최됨.
- 임시회: 대통령 or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2) 입법에 관한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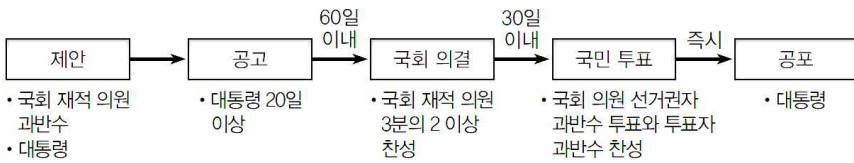
①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 국회의원 10인 이상·위원회 법률안 발의 or 정부의 법률안 제출
- 2)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3-1)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 → 법률의 효력 발생
- 3-2) 대통령의 15일 이내 법률안 거부권 행사
- 4)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
- 5) 5일 이내 공포(5일 이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

★ 과반수는 절반 이상인 아닌 '절반 초과'를 뜻함.

② 헌법 개정



★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음.

(3) 재정에 관한 권한

-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 예산의 결산 심사 권한 (≠ 결산 검사(감사원))

(4)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 국정 감사권(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정기적')
- 국정 조사권(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로 '일시적')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 탄핵 심판 청구

★ 국회 구성원 이외의 대다수의 헌법 기관 구성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됨.
EX)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장 및 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감사원장...

(5)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 특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불가능)
- 면책 특권 (국회 내에서의 언행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X)

10. 국가 기관 -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① 대통령의 지위
 -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 ② 대통령의 권한
 - 헌법 기관 구성권(임명권)
 - 법률안 거부권
 - 조약의 체결·비준 (≠ 체결·비준 동의권(국회))
 - 계엄 선포권(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짐.)
 -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긴급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공무원 임면권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지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서는 지위에 따른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2) 행정부의 주요 조직

① 감사원

-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짐.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감사 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 X)
- 국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결산 심사(국회))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권
- 행정 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권

② 국무 회의

-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
- 의장(대통령), 부의장(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
- 대통령의 정책 집행은 국무 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음.

③ 국무총리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국무 회의의 부의장
- 행정 각부 통할
-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가짐.
-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보좌, 대통령 권한 대행

④ 행정 각부 장(長)(장관)

-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 및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집행

11. 국가 기관 -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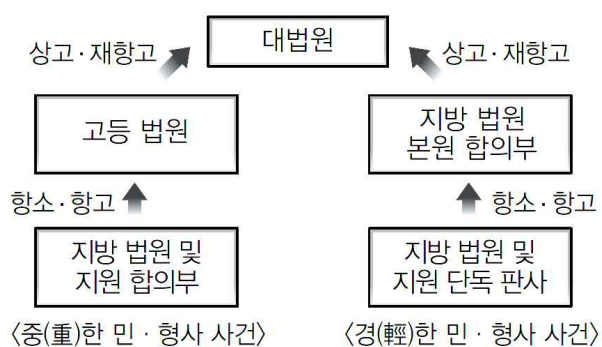
(1) 사법부

- ① 법원의 기능과 권한
 -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사법(司法)부에 해당함.
 - 명령·규칙 등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심사권을 가짐

② 대법원

- 상고·재항고심을 관장하는 최고 법원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구성
-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함.

③ 심급 제도



+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선거 소송)

- 단심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광역 비례 대표 의원

★ 금품 수수 등 선거법(공직 선거법) 위반 범죄는 형사 재판으로 진행됨.

④ 사법부의 독립

- 헌법으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됨.
-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음.

(2) 헌법 재판소

① 헌법 재판소의 구성

- 대통령이 9인 모두를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
-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을 포함하여 모두 임명
- 헌법 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② 헌법 재판 유형

심판 유형	청구권자	인용 정족수
위헌 법률 심판	법원	6인 이상
헌법 소원 심판	국민	
탄핵 심판	국회	
정당 해산 심판	정부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과반 찬성

- 1) 위헌 법률 심판(법원 직권 제청 가능)
 -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심판 제청
- 2) 헌법 소원 심판: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 ㄱ. 권리 구제형: 공권력 행사 or 불행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기본권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
 - 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

12. 지방 자치^{***}

(1) 지방 자치의 의의

- 권력 분립 원리의 실현
 -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수직적' 권력 분립
 - 지방 의회 - 지방 자치 단체: '수평적' 권력 분립

(2)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기관

① 지방 의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주민 투표 거칠 필요 없음.)
- 지방 자치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조사권
- 결산 승인권

②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자치 사무에 대한 규칙의 제정(조례의 범위 내에서 가능)
- 소속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 편성권
- 지방 의회 의결(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
- 공무원 임면 및 감독권

③ 교육감

- 광역 자치 단체 단위에서 선출됨.
-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예산 편성권 및 조례안 거부권

(3) 지방 자치 제도 (①~③은 직접 민주제 요소)

① 주민 투표제 (= 국민 투표제)

-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정책 등을 주민 투표로 결정

② 주민 소환제 (= 국민 소환제)

- 주민 소환의 요건
 - 지방 자치 단체장 or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지방 의회 비례 대표 의원은 제외)

③ 조례안 개폐 청구권 (= 국민 발안제)

- 지방 자치 단체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조례안 개폐 청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음.

★ 조례안 개폐 청구권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도중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의거해 주민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는 직접적으로 출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 도중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도를 묻는 문항은 출제된 적이 없으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 참여 예산제

-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 주민 참여 예산제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예산 편성안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음.

6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3. 선거와 선거 제도***

(1)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① 보통 선거 : 일정 나이 이상 국민은 누구나
- ② 평등 선거 : 모두에게 동등한 표 가치 부여함.
- ③ 직접 선거 : 내가 직접 투표해야 함.
- ④ 비밀 선거 :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게 함.

(2) 선거 제도 (상대적인 특징)

① 선거구제에 따른 구분

소선거구제	- 후보자 파악 및 선거 관리 용이 - 다수당 출현 가능성이 큼 → 정국 안정에 유리함. - 사표의 과다 발생 가능성 -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 심화 가능성
중·대선거구제	- 상대적으로 사표가 적게 발생함. -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 → 다양한 의사 반영 → 정국의 불안정 요소 - 선거 과열 가능성 ↓ - 후보자 파악 및 선거 관리 어려움. -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가치 차등 문제 발생

② 대표 결정 방식에 따른 구분

단순 다수 대표제	-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 - 당선자 결정 방식이 쉽고 간편함. - 당선자의 대표성 ↓
절대다수 대표제	- 유효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해야 하는 방식 -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음. - 선거 운영의 복잡, 선거 비용 ↑

★ 절대다수 대표제의 대표적 예시

1. 결선 투표제

- 1차 투표에서 유효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후보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선거 방식

2. 선호 투표제

-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투표 결과 1순위 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순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택한 표를 2순위로 택한 후보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

★ 절대다수 대표제로 오인할 수 있는 선거 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유권자가 매긴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경우, 유효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대다수 대표제가 아니다.

(3)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

대통령		- 임기 5년 - 중임 불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 임기 4년 - 중임 가능 - 소선거구제
	비례 대표 의원	- 임기 4년 -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
지방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 임기 4년 - 3회에 한해 연임 가능
	광역 의회 의원	- 임기 4년, 중임 가능 - 지역구: 소선거구제 - 비례 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
	기초 의회 의원	- 임기 4년, 중임 가능 - 지역구: 중선거구제 - 비례 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
	교육감	- 임기 4년 - 3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정당 공천 X

+ 각 선거구의 유권자 1인당 투표의 가치 : 인구 ↓ → 투표 가치 ↑

+ 비례 대표의 선거는 1개의 선거구로 인정함.

→ 우리나라의 선거구 개수는 254(소선거구)+1(비례)=255

★ 봉쇄조항 : 정당 득표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비례 대표 의석 배분

14. 정치 참여 집단***

(1) 정당

-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함.
- 정치적 충원 기능(공천을 통해)
-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짐.
- 정부와 의회를 매개

(2) 이익 집단

- 특수 이익의 실현을 목표 (사회 보편적 이익과 충돌 우려)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집단

(3) 시민 단체

-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집단

(4) 언론

-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5)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의 공통점

- 정부 정책을 비판 및 감시
- 국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 정치 사회화 수행
-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의 주체임.

15. 민법의 기본 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1)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	-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의 강요나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유,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자유를 모두 포괄함.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 소유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 - 국가나 다른 개인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과실 책임의 원칙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책임 X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보완

계약 공정의 원칙	다음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	-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사되어야 함. - 개인의 소유권도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강조함.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 사업자의 환경 침해 or 제조물 책임 or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 대체된 것 X (∴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도 당연히 현대 민법에서 적용됨.)

16. 계약의 기초^{☆☆☆}

- (1) 계약 성립의 요건 : 청약과 승낙의 합치되는 시점 (계약서 필수X)
-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함.

의사 능력	- 자신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정신 능력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 일반적으로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행위 능력	-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일률적인 기준(19세 이상)이 존재함.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은 제한됨.

(2) 계약 성립 이후, 취소 가능 경우와 무효인 경우

무효	취소
- 의사 능력이 없는 자와의 계약 -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행위 능력이 없는 자와의 계약 -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 등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 ★ 계약의 효력이 없는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도, 계약이 일단 성립하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3) 채무 불이행

-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

채무 불이행 유형	-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
자기의 책임이 없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파손 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두 가지 해결 방안
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함.
ㄴ. 계약의 해제권
ㄷ. 법원에 강제 이행을 청구

(4) 채무 불이행 심화 (사용자 배상 책임 연계)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갑(사용자)은 고객 을(고객)에게 피자 주문을 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병(피용자)에게 피자를 을의 집에 배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병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피자를 쏟게 되었다.

- 피자 배달 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인 갑과 고객인 을임.
→ 병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님. 따라서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음.
→ 갑이 고용한 병의 과실로 을과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계약 당사자인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짐.

17. 미성년자의 계약***

- (1) 미성년자의 계약을 보호하는 이유
 - 미성년자는 민법상 판단 능력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행위 능력을 제한함.
 -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높음.
- (2) 미성년자의 계약을 보호하는 제도
 - ①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②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확정적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ㄱ. 법정 대리인에게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으로 한 법률행위(EX. 용돈)
 - ㄴ.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 ㄷ.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
 - ★ ②의 ㄱ, ㄴ은 법정 대리인에게 간접적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임.
 - ★ ②의 ㄷ은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임.
- (3) (2)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보호 제도
 - ① 미성년자 측(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 모두)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②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제한됨.
 -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신분증 위조 등)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동의서 위조)
- (4)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 ① 취지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 측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공통 행사 요건: 미성년자 측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 ㄱ. 확답 촉구권
 - 행사 대상: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또는 추인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것.
 - 계약 체결 이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알았던 관계 없음.
 -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함.
 - ㄴ. 철회권
 - 행사 대상: 미성년자 or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
 - 계약 체결 이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만 행사 가능.

★ **추인**
 추인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추가로 승인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동의의 효력과 같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만드는 효력을 가짐. (당연히 추인한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행사 불가)

18. 불법 행위의 기초***

- (1) 불법 행위의 정의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 (2)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
 - 1) 가해 행위
 - 2) 고의 또는 과실
 - 3) 위법성 : 원칙적으로는 인정됨. 그러나,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4) 손해의 발생 : 물질적/정신적 손해 모두 포함됨.
 - 5) 인과 관계 : 손해의 발생과 상식적으로 관계가 있는 행위인가?
 - 6) 책임 능력 :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는 능력
- ★ **책임 능력**
 계약 관계에서 다루는 행위 능력은 객관적인 기준(19세 미만)에 따라 제한된다. 그러나, 책임 능력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심신 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봄.
 - 평가원에서 10세 미만인 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봄.
 - 이외의 경우에는 선지에서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없는 경우'로 선지에서 케이스를 제시할 것임. 따라서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외울 필요 없음.
- (3)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의 구분

★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의 차이**

 1. 채무 불이행 : 채권 관계를 전제로 하여 문제 삼음.
 2. 불법 행위 :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따라 문제 삼음.
 - 갑과 을이 손해 배상에 합의하더라도 을은 갑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
 - 법원은 갑에게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4) 손해 배상
 -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포함)

19. 특수 불법 행위^{☆☆☆}

(1)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무능력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책임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책임 -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됨.
사용자 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종업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종업원의 선임이나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됨.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공작물의 점유자가 일차적 책임(과실 책임)을 짐. -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짐.
동물 점유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호와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됨.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음.
공동 불법행위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행한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여러 사람의 행위 중에서 누구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히 망을 본 경우도 포함. - 손해 배상 청구는 한 명에게 몰아서 해도 됨. - 한 명이 면책된다고 해서 모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님.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자의 손해 배상 책임

- 책임 능력이 X 미성년자의 부모 :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
 - 책임 능력이 O 미성년자의 부모 :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
- 단,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면, 두 책임 모두 면제됨.

20. 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형식적 요건	- 혼인 신고를 해야 함.
실질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중혼 X) -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함. → 강압 또는 속임수는 취소 사유(일반 계약과 동일)임.

(2) 혼인의 효력

- 새로운 친족 관계 형성(법률혼만)
- 부부 별산제(사실혼도 인정)
- 일상 가사 대리권(사실혼도 인정)
- 동거와 부양의 의무(사실혼도 인정)

(3) 이혼

①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짐. -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 시 효력이 발생함. - 이혼 숙려제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단,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 등은 숙려 기간을 줄이거나 없도록 할 수 있음.)
재판상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 가정 법원의 판결 확정시 효력이 발생함. → 이혼 신고를 꼭 안 해도 됨. - 귀책 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② 이혼의 공동된 효력

- 양 당사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됨.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인정됨.)
- 양육 말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권' 가짐. (원칙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가짐.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 면접 교섭권 배제 가능)

21.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1) 친자 관계

친생자	-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의 자녀 -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 -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 형성
양자	일반양자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속 관계가 존속함.
	친양자 - 가정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됨. -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됨.

(2) 친권과 면접 교섭권

- ① 친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
→ 거소 지정권, 재산 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 자녀가 입양된 경우, 해당 자녀의 친권은 양부모에게 있음.
- ② 면접 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일방과 그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쌍방으로 가짐.)
→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한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짐.
→ 친양자 입양 등으로 친족 관계가 없어진 경우, 쌍방의 면접 교섭권은 상실됨.

(3) 상속인의 순위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배우자 50% 가산)
2. 직계존속 및 배우자 (배우자 50% 가산)
3. 배우자
- ...(이하 생략)...

★ 친족에 관한 내용의 경우 일부러 단권화 노트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친족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친족에 관한 어려운 선지가 포함된 경우 소거법으로 문항을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여, 친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여백에 필기하여 단권화 노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2. 죄형 법정주의***

(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필요성

- ① 현대적 의미: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범죄의 구성요건, 처벌 등이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함.
→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 아니라 법률의 적정성도 판단
→ 법관 또는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② 필요성: 법관 또는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 (특히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는 근거가 됨.

(2)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의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로 결정되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구분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률을 적용할 때에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적용하여 위배되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반면, 명확성의 원칙은 법 자체의 명확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위배되는 원칙이다.

정리하자면,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 적용’으로 인해 위배될 수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반면,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으로 인해 위배될 수 있는 죄형 법정주의로 이해하면 문제 풀이 시 상당히 도움된다.

23. 범죄와 형벌***

(1) 범죄의 성립요건

① 구성요건 해당성

→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인가?

② 위법성

→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가?

→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그러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or 업무로 인한 행위 등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자구 행위	청구권의 실행 불능을 피하기 위한 행위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한 행위

③ 책임

→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가?

→ 책임 조각 및 감경 사유

책임 조각 사유	-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 심신 상실자의 행위 - 강요된 행위
책임 감경 사유	- 심신 미약자의 행위 - 청각과 발음 기능 모두 장애가 있는 자의 행위

(2) 형벌

생명형	- 사형
자유형	- 징역: 1개월 이상 수감, 정역 부과 O - 금고: 1개월 이상 수감, 정역 부과 X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 정역 부과 X
명예형	- 자격 상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박탈함.(무기 금고, 무기 징역, 사형 때만 부과) - 자격 정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일정 기간 제한함.
재산형	- 벌금: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의 금액 부과 -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 부과 (≠ 과태료) - 몰수: 범죄에 이용했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함.

★ 과료? 과태료?

과료는 형벌인 반면에, 과태료는 행정 처분으로서 형벌이 아니다. 한편, 운전면허 취소는 형벌이 아닌 행정 처분이므로, 학습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보안 처분 : 대안적 제재 수단

치료 감호	- 치료 감호 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 - 심신 상실자/심신 미약자, 마약, 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보호 관찰	- 사회생활 영위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받게 함. - 선고 유예를 받거나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 가석방된 경우 등
수감 명령	- 범죄성 개선을 위한 진단, 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 명령	-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를 수행함.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 가능

★ 형벌과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없음.)

24. 형사 절차***

(1) 수사 절차

① 수사의 개시

- 고소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 고발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
- 수사 기관의 인지
- 자수 또는 현행범 체포

② 불기소 처분의 이유

유죄 취지	기소 유예	-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음.
무죄 취지	혐의없음	- 증거가 없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죄가 안 됨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or 책임 조각인 경우
공소권 없음		- 피의자의 사망, 공소 시효 만료 등

(2) 공판 절차

① 공판 절차의 개시

-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됨.
- '피의자'의 신분에서 '(형사)피고인'의 신분이 됨.
- 검사와 가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됨.

★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님. 단,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② 공판 절차

- 진술 거부권 고지 주체 수사 기관(수사 중) → 판사(공판 중)
- 증명 책임 : 검사에게 있음(피고인 X).
-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음.

(3) 판결과 형 집행

①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무죄 판결		-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유죄 판결	실형	-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집행 유예	-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 상실됨.
	선고 유예	-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됨.

② 형의 집행과 상소

- 실형 판결의 확정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이 이루어짐.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재판에 대해 상소할 수 있음.
- 피고인만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해당 상소심 관할 법원은 원심보다 중(重)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

★ 미결 구금

체포, 구속과 같이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형사 절차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여, 미결 구금된 일수의 전부를 형벌 기간에 산입한다.

25.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1) 형사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인권 보장 제도

- 적법 절차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원칙상 불구속 수사·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선 변호인 제도
- 진술 거부권

(2) 수사·재판·형 집행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① 영장 제도

-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서만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가능함.
- 현행법 체포, 긴급 체포의 경우 사전 영장 발부가 필요 없음. (체포 이후 구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②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 검사가 구속 영장 청구 시 판사가 발부할지에 대한 판단
-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 보장을 위함.

③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로 인해 구속된 이후, 그 적법성 및 필요성을 이유로 피의자인 자신을 석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심사 제도

★ 체포된 이후 체포의 적부를 청구하는 체포 적부심도 존재하며, 이 또한 법원에 청구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④ 보석 제도

-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하는 것. (재판 과정에서만)

⑤ 재심 제도

-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 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3)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 제도

①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경우(재산상 피해는 해당 안 됨.)

② 배상 명령 제도

-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인정됨.

③ 형사 보상 청구 제도

- 형사 절차에서 구금된 적이 있는 사람 중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④ 명예 회복 제도

- 무죄 판결 당사자가 청구하면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함.
- 법원의 직권으로는 불가능(인권 보호 차원)

26. 소년 사건 처리 절차^{**}

(1) 소년 사건에서의 소년의 분류

범죄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

(2) 소년 사건에 대한 처리

① 경찰의 사건 처리

- 범죄 소년 : 검사에게 사건을 보냄.
- 촉법소년 :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

② 검사의 사건 처리(범죄 소년만 해당)

-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
-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 일반 법원으로 송치 (기소)

③ 가정 법원 소년부의 사건 처리

- 촉법소년, 범죄 소년에 대해 보호 처분 부과
-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범죄 소년이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범죄 소년을 형사 법원에 송치함.

검사의 기소가 있던 경우	형사 법원에 직접 송치
검사의 기소가 없던 경우	검사에 송치 → 검사가 형사 법원에 송치

④ 형사 법원의 사건 처리

- 형사 재판 진행
-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

(3) 재판의 결과는?

-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음.
- 소년법상 보호 처분과 형벌은 동시에 부과될 수 없음.

27. 국민 참여 재판^{*}

(1) 대상 재판

- 지방 법원 합의부(1심, 형사 재판) 사건을 대상으로 함.
- 피고인의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음. (법원 직권 진행 X)

(2) 특징

- 배심원의 조건 : 20세 이상 일반 국민 (직업 제한 있음.)
- 배심원의 평결이 판결을 구속하지 않음.
- 단,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판장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아울러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28. 근로 계약***

(1) 연소 근로자

- ① 정의: 18세 미만의 근로자
→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자 / 필요 없는 자로 구분할 수 있음.
- ② 취직 인허증과 연소 근로자
→ 15세 미만인 자 또는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함.
→ 중학교를 졸업한 15세 이상의 연소 근로자는 취직 인허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함.
- ③ 연소 근로자 공통 적용 사항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단, 모든 연소 근로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정 대리인이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연소 근로자도 단독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연소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18세인 근로자에 대한 고찰

18세인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18세인 근로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둘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 계약 또한 민법상 계약으로서, 18세인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 기준법 적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 ① 근로 기준법 적용 공통(연소 근로자 = 성년 근로자)
 - 임금, 근로 시간, 주휴일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휴게 시간 지급 (4시간 : 30분 이상, 8시간 : 1시간 이상)
→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즉, 임금 계산 시 고려해서는 안 됨.
 -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지급
 -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지급하여야 함.
 -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연장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각각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위 내용에 어긋나는 계약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만 무효

② 근로 기준법 적용 차이(연소 근로자 ≠ 성년 근로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	성년 근로자(18세 이상)
-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 가능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능
- 1일 최대 1시간, 1주 최대 5시간 연장 근로 가능	- 1주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 가능
-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불가	-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가능

★ 휴일 근로가 금지될 뿐, 계약서에 근로일을 주말로 지정하는 것까지 금지 되는 것은 아님.

29. 근로자의 권리 보호***

(1) 근로 3권

- ① 단결권
→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② 단체 교섭권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③ 단체 행동권
→ 쟁의 행위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 정치 활동 or 경영 관여 목적의 단체 행동은 X
→ 사용자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이후 직장 폐쇄(사용자의 쟁의 행위) 가능함.

(2)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 ① 부당 해고 :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함.(불가피할 시 1달 임금 지급)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가능함.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당사자만 가능
- ② 부당 노동 행위 :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당사자와 노동조합 모두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와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 ③ 해고 무효 확인 소송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임(행정 소송 X).
→ 원고는 피용자, 피고는 사용자 측임.
- ④ 노동 위원회와 행정 소송
→ 당사자가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지방 노동 위원회 심판에 대한 재심 신청 (회사 or 당사자)
→ 중앙 노동 위원회 심판 불복 시 중앙 노동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 소송을 행정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부당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 돌아갈 수 있고,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30.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사상적 배경	홉스의 인간관	로크의 세계관
평화 보장 방안	- 힘의 우위 확보 -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	- 국제법, 국제기구, 초국가적 행위체의 중요성 강조 - 집단 안보 체제
한계	- 국가 간 의존적 관계 간과 -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함.	-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을 간과함.
공통점	-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31. 국제법의 법원(法源)과 한계***

(1) 국제법의 법원(法源)

① 조약

- 체결로써 성립하는 성문화된 형식의 법원(法源)
→ 그 내용과 성립 시기가 다른 법원(法源)에 비해 명확함.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가짐.
→ 일부 조약의 경우 체결 이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님.
- 양자 조약(양국 간)과 다자 조약(3개 이상 국가 간)이 있음.
-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 가능함.

② 국제 관습법

-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의무로 인정되어 형성된 법원(法源)으로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음.
-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이 있음.

③ 법의 일반 원칙

- 문명국이 공통으로 승인하고 따르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
-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이 있음.

(2) 국제법의 특징과 한계

① 특징

-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헌법 하위의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 및 효력을 가짐.

② 한계

-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움(강제로 국제법의 이행을 집행할 국제기구의 부재).

3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1) 총회

① 의의와 구성 방식

- 의의: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구성: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됨.

② 특징

-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됨.
→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할 수 없음.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비상임 이사국 선출 권한을 가짐.

(2) 안전 보장 이사회

① 의의와 구성 방식

- 의의: 국제 평화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구성: 고정된 5개 상임 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임기 2년, 대륙별 안배 고려)으로 구성됨.

② 특징

- 국제 평화 유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이행 등을 위해 유엔 평화군 파견, 경제적 조치 등의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가짐.
- 의결 정족수는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임. 단, 의결 사항에 따라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실질 사항: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O
→ 절차 사항: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X

(3) 국제 사법 재판소

① 의의와 구성 방식

- 의의: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
- 구성: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서로 다른 국적의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② 특징

-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 관할권을 가짐(임의적 관할권).
- 재판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제재할 수 없음.
- 국가만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국제 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재판 청구 가능
- 국제 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 제시

* 유의 사항

- 해당 정치와 법 단권화 노트의 저작권은 정경대학 다람쥐(윤준수)에게 있습니다. 학교 또는 개인의 학습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해당 자료를 무단 도용 또는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대응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 자료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오류 사항은 junsu020729@naver.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해당 자료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이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꿈을 위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딛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